

공 개



의안번호	제 22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8. 12. (제3차 서면)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8. 12.

1. 의결주문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23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신청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 국가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의 범위·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3. 주요골자

가. 신청개요

한국산업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신청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요청

신청 주요내용

- 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 나. 채 권 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소유자
- 다. 보증신청액 : 10조원 이내의 원금과 이자
- 라. 채무의 조건
 - 상환기간 : 2025.12.31일 이내
 - 상환재원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수입금

나. 심사의견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고용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을 위해 '20.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중 기금 관련 내용>

- (규모)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지원조건) 고용안정과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규모 조정 (40조원 → 10조원(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지원이 어려운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2차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옴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

이에 국가채무보증 신청은 그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정상화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환자금조달계획서의 타당성도 인정됨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참고>

< 참 고 >

☐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 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 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 지 1 >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 필요성과 상환자금조달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별 지 2 >

국가채무보증신청서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8월 일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 석 훈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1. 신청인

가.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산업은행

나. 대표자 : 강 석 훈

다.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2.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용

가. 사업내용(조달하는 채원의 용도)

- 한국산업은행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나. 채무자 : 한국산업은행(관리운영자)

다. 채권자 :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소유자

라. 채무금액 : 원화기준 10조원(2022년까지 발행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포함한다)상당 이내의 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마. 채무발생일 :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시

바. 채무의 조건

(1) 이자율 : 발행당시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결정

(2) 상환기간 : 2025.12.31일 이내

(3)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 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의 수입

3. 국가보증이 필요한 사유

가. 주채무발생 사유

-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금융지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지원 및 자본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원이므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바, 한국

산업은행 자체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은행이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한 자금으로 효율적인 금융지원 목적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임

나. 국가보증이 필요한 사유

(1) 국가의 채무보증이 필요한 사유

-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2)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1항
-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2조(채무보증 신청)

4. 준수사항 :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위의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변동이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관리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자금 운용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첨부자료

가. 사업계획서 (첨부 1)

나. 채권발행계획서 (첨부 2)

다. 지원자금 회수 계획서 (첨부 3)

라. 기타 참고서류 (첨부 4)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 한국산업은행

○ 설립근거 : 한국산업은행법(1953.12.30)

* 시행일 : 1953.12.30

○ 설립목적 :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자본금 현황 : 법정 자본금 30조원

- 납입자본금 및 출자자

(단위 : 억원)

출자기관	금 액	비 고
정 부	222,786	2022.2월 3,920억원 증자
계	222,786	

□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 설치목적 :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업의 개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및 고용안정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함

- 고용과 국민경제 비중이 큰 기업 중 코로나19로 자본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

-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효과를 사회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고용안정, 자구노력, 이익공유 장치 등을 마련

○ (지원대상)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지원 및 자본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9대 기간산업^{주)}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음

주)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 기금의 재원조성 규모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경제 전반적으로는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규모를 10조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자 함

○ (지원조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안정 및 정상화이익 공유 조건 등을 부과

-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여 고용비중이 큰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
-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지원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첨부 2>

채 권 발 행 계 획 서

□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 발행금액 : 10조원 이내 (2022년까지 발행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포함한다. 외화는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 사용내역 :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

○ 발행조건 등

-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 발행

* 산금채 발행방식^{주)}을 준용

주) 매출발행, 인수발행, 모집발행

- 발행금리 : 既정부보증채*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한국장학채권^{주)} 등

주) 한국장학재단채권 금리("22.8.1자) : 3.467% (3년 만기)

- 상환기간 : 2025.12.31일 이내

-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
산업안정기금의 수입

○ 발행시기 : 2023년 중

<첨부 3>

지원자금 회수 계획서

☐ 채권만기 상환일정(추정)

○ 2025.12.31일 이내로 만기를 지정

☐ 코로나19라는 대외변수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거나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애로상황에 있는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시적 고용·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조속한 정상화 가능

○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어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애로를 겪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원리금이 만기일에 차질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부담 발생소지를 차단할 예정이며,

☐ 한국산업은행은 대상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정상화시 원활한 자금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임

-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대상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견인 및 신속한 자금회수 실행
- 정상화 시, 정부를 비롯한 사회전체가 정상화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주)}을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조성

주)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총 지원금액의 10~2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의 인수 형태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의 구체적 조건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지원

기 타 참 고 서 류

□ 관련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보증채무관리 규칙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융지원과
연 락 처	02-2100-1671